

# 40년만 행정통합... '특별시 지정유산' 도입한다

## 전남광주 정체성 담은 핵심 유산 대상

### 광주학생독립운동·무등산 등 후보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 정체성을 상징할 '특별시 지정유산'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국가·도 지정문화재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통합 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유산을 '특별시 지정유산'으로 직권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지정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40여 년 만의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문화유산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기존 국가유산이나 사·도 지정문화재로 포괄되지 못한 유산을 발굴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향후 국가유산 지정이나 국제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지정 대상은 건축물과 동산, 기념물 등을 포함한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전반이다. 선사·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대표 유산을 폭넓게 포함해 지역 역사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선사·고대 분야에서는 화순 대곡리 유적과 함평 초포리 유적 및 출토 유물 일괄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세·근대 분야에서는 장성 하서 김인후 종가문서,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 복식탑 납제석 탐지, 순천 예교진병일록 '섬초집' 등이 포함됐다.

이들 유산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으나, 지역 역사성과 연계할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현대 유산으로는 광주와 나주 일대에 걸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유적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무등산이 주요 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자연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방식으로 지정 범위를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지정 절차는 사·도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위원회가 현지 조사와 검토를 거쳐 특별시가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일관된 기준으로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미리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4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사·도 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지정 대상 선정과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6월 위원회 검토를 거쳐 7월 지정 심의와 고시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유산으로의 단계적 격상까지 염두에 둔 제도"라며 "통합 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무회의의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 무안서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 오늘 오후 2시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광주시는 국방부가 4월1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군주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마련됐다.

국방부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이다.

국방부·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주민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

을 마련해 설명회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체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무안군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광주시 공공환경설단장은 "군공항 유치 지역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국가 정책적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본격 시행

### '개발지원특별법'... 화순광업소 일대 경제진흥투자 활성화 기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돼 화순광업소 일대에 경제진흥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특별법이 국회로 통과됐고, 이후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되게

됐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아래 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지면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 과정 등에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 탄광은 1905년 광업권 등록 이후 118년간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국 4대 탄광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과 수요 감소로 화순광업소는 폐광을 결정했고 지난 2023년 종업식을 가졌다.

화순군은 지난해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총 3579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제진흥개발사업을 확정했고, 이 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조

사(에타)를 통과했다.

아울러 화순 탄광의 역사를 담은 '국립탄광박물관'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복합체형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오는 2028년 착공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용 유발효과는 5602명, 취업 유발효과는 7804명, 생산 유발효과는 1조170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

### '노동절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과 교육감의 행위 제한이 본격 적용된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지방선거 60일 전 단체장 행사·여론조사 제한

### 4일부터 적용... 후원금지, 정당행사 참석도

### 전남도선관위, 사전예방강화... 위반시 조치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전면 제한된다. 정당·후보자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위 제한이 본격 적용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동·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 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치적 홍보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 당원 대상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여론조사 규제도 강화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도,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지원 총력

### 간담회서 물류비·원자재 상승 등 이종고 청취

### 긴급 수출지원 시책·경영안정자금 대책 논의

전남도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수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1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해상 운임 급등△선원취급 부담 증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광양항 기항 노선이 축소되거나 중지됨에 따라 타 항만 이용을 위한 내륙 운송료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프타 등 주요 원료 수급 차질로 포장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판매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산업용 화학 원료를 수출하고 있는 캡슐루션(주) 대표는 국가에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대체 물류망 확보 지원과 물류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긴급 수출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민순희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중동 상황이 단기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며 "수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민주당 여수산단'서 계속

최근 중동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프타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항로 불안에 따른 운임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집적지로, 원료 수급 차질이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원료 확보 비용 증가와 선적 지연 등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동률 조정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

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물류비 부담 완화, 세계 지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나프타 대안으로 인한 여파는 상당한 실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광양·순천 등 전남 동부권 제조업의 핵심 축인데, 원가 상승과 생산 차질이 협력업체와 고용시장까지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원료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